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국의 시각 및 평가

2016. 12. 1

윤승현 연구위원 (chinayoon@naver.com)

요 약

1. 중국정부의 공식 반응 / 1
2. 트럼프의 對중국 경제정책 : 무역보호주의 확대 / 3
3. 트럼프의 對중국 정치·외교·안보정책 : 미지수 / 6
4. 對美 동맹국 및 북한문제에 대한 평가 / 9
5. 중국측 전망 및 대응방안 / 13

보고서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 약 》

□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

○ 양국관계 유지를 위해 공동 노력

- 시진핑 주석(11.9),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당선인과 함께 이런 노력을 해나갈 것을 기대하며 서로 충돌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
- 중국 외교부(11.10), “새로운 미국정부와의 공동 노력과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기대”

□ 트럼프의 對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중국 시각 : 무역보호주의 확대

○ 긍정적 분석 : win-win 효과 기대

- 트럼프는 상인 출신, 서로의 이익에 부합할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발표는 중국에게 아주 유리한 행보가 될 것으로 기대

○ 부정적 분석 : 새로운 중국 포위 무역전략 구사 가능성

- 무역보호주의 성향 強, TPP 명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중국 포위 무역전략 가능
- 환율 측면에서 위안화의 환율 압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

○ 중국측 언론 및 전문가 분석

- 트럼프의 불확실성은 중국에게 도전이자 기회
- 중국은 제2의 경제대국이므로 미국도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
- 트럼프시대 중·미 경제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
-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
- 그러나, 중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관점 또한 존재
- (환구시보 설문조사) 중·미 관계 변화가 없을 것(77%)

□ 트럼프의 對중국 정치·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중국 시각 : 미지수

- 미국 남중국해 군사력 최소화 가능성
- 아시아 동맹관계의 변화가 중국에 미칠 영향 주시
- 아시아 재균형 전략 대폭 수정 전망

□ 對美 동맹국 및 북한문제에 대한 평가

- 한국은 중·미간 균형외교에 치중하게 될 것
- 트럼프시대 한반도정세는 현재보다 더 긴장되지 않고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측 전망 및 대응방안

- 향후 4년간 중·미 관계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도전적일 것
 - 남중국해는 다시 풍랑 속으로
 - 양국간 무역전쟁과 화폐전쟁 심화
 - 더욱 강경해질 미국의 對中외교
 - 글로벌전략으로 중국 포위
-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 一帶一路를 통해 對美 의존도 점진적 축소
- 미국정부와 새로운 소통 방안 마련
- 중·미 협력관계 유지

1.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반응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
 -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관계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
 - “최대 개발도상국과 최대 선진국인 중·미 양국은 세계 양대 경제체제로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발전과 번영을 촉진할 중요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지속해 온 중·미 관계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 부합한다.”
 - 중·미 관계를 고도로 중시, 당선인과 함께 노력해 충돌이나 대립하지 않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길 기대, 중·미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 큰 진전을 이뤄 양국 국민과 세계에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대변인 정례브리핑(11.10)
 - 우리는 미국 대선의 최종 결과를 주시, 미국의 새 정부와 공동 노력해 중·미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지속하도록 추진하길 기대
 - 트럼프의 45% 관세 부과 공약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중·미간 경제무역 협력은 양국관계의 촉진제이자 버팀목, 양국 경제협력의 본질은 ‘호혜공영’이며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 미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라도 자국민의 이익에서 출발해 자국민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 것으로 믿고

있음을 강조 → 트럼프가 對中 관세 폭을 크게 올리는 것이 미국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

- 중·미 무역으로 미국 일자리 축소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중·미 무역 관계에 분열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사실 경제·무역관계는 반드시 상호 공통의 이익이 되고 있어, 지난 수십여년 동안 중·미 무역이 양국 국민에 이익을 가져다줬고 일자리도 늘어났음
- 트럼프가 선거기간 對중국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이런 평가에 동의할 수 없으며,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논평 모두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음
- 트럼프 당선인을 중국으로 초청 계획 : 양국이 수교 40여년간 고위급 교류 왕래를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으며, 고위급 교류는 양국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 → 조만간 양국 정상간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

2. 트럼프의 對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중국의 시각 : 무역보호주의 확대

○ 긍정적 전망 : win-win 효과 기대

- 트럼프는 상인 출신 : 그의 상인적 의식 감안時 향후 중국에게는 더 많은 새로운 협상과 국면을 가져다 줄 수 있음. 특히 상인이 제일 중시하는 이익을 만족시켜줄 수만 있다면 보다 쉽게 서로의 이익에 부합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발표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만 제외한 무역협정인 TPP를 중지할 것이라는 발표는 중국에게 매우 유리할 것으로 기대. 트럼프가 향후 미국의 어려운 실질적인 경제상황을 우선 피력한다면 단기적으로 美 달러화 약세가 형성될 것이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위안화의 압력을 줄여줄 것으로 판단

○ 부정적 전망 : 새로운 중국 포위 무역전략 구사 가능성

- 무역보호주의 성향 強 : 진정으로 중국에 강경한 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대해 우려. 미국의 TPP 탈퇴 발표가 중국에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트럼프가 스스로 또는 美 의회 등의 압력을 받아 TPP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 새로운 중국 포위 무역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추측

- 환율 : 트럼프도 장기적으로는 美 달러화 강세로 나갈 것이고, 대선 과정에서 자주 중국정부의 환율 개입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위안화의 환율압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

○ 언론 및 학자 분석

-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쑨칭하오(孫成昊) 연구원(차이나 데일리 기고문, 11.9)
 - 트럼프의 불확실성은 중국에 도전이자 기회, 곧 상호 교류가 없었고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은 도전이지만, 실용적인 점은 기회
-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외교연구실 주임 위안정(袁征)(人民網 기고 (11.10), “미국의 對중국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인가?”)
 - 미국 노동자들은 중국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원망.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은 중국에 국제규정을 통한 단속, 세계무역기구(WTO) 중재 등 무역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對중국 정책은 중국의 국제관계에서의 지위 및 자국을 향한 미국측 요구에 달려있으며, 중국은 제2의 경제대국이므로 미국도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
-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다웨이(達巍) 연구원
 - TPP가 난관에 봉착해 중국이 주장하는 지역자유무역계획을 추진하는데 기회가 될 것
 - 미·일, 한·미 연합은 약화될 것이고 미·러 관계는 끈끈해져 강대국간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이런 변화는 중·미 경제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타오원자오(陶文釗) 연구원
 - 트럼프행정부 출범 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실제로 45%의 관세를 물릴 가능성은 적지만, 다만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
 - 중·미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양자투자협정(BIT)은 트럼프시대에는 당분간 지속되기 어려울 것임

-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 류밍디(劉鳴鏞)
 -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이익이 될 것
 - 트럼프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 성향으로 중국의 지정학적 정치적 압력이 줄어들어 대신 중국의 對美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 특히 트럼프가 미국 실물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중·미 양국간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공통점이 더 늘어날 것임

-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설문조사
 - 트럼프 당선 후 중·미 관계 변화 여부를 묻는 주제로 3,000여명의 누리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응답

3. 트럼프의 對중국 정치·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중국의 시각 : 미지수

○ 미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최소화(중국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장권서(張軍社) 연구원)

-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미 항모와 군함도 모두 비용이 드는 만큼 향후 미국 해군력의 남중국해 파견 횟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임

○ 아시아 동맹관계 변화가 중국에 미칠 영향 주시(중국 군사과학원 중미 관계센터 야오윈주(姚云竹) 前주임)

- 트럼프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아시아 동맹관계의 변화와 관련해서 주시 필요. 향후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5개 동맹국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한반도문제에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중국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함
- 트럼프가 역대 미국정부와 달리 아시아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줄다리기 과정에서 틈새가 생길 수 있으며, 중국은 이를 기회로 활용해 새로운 국제관계와 새로운 정책 노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중국이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일이 터지기도 전에 우려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정책 및 태도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연구하면서 트럼프 최측근과의 관계형성에 주력해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함. 중·미간 안정적 관계 형성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 국익에도 부합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대폭 수정 가능성(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주평(朱鋒))

- 분명한 것은 트럼프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대폭 수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트럼프정부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기본 뼈대를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임
- 아태지역 최전선에 배치된 군대와 동맹체계를 흔들 가능성은 없을 것임. 아태지역은 이미 미국의 대외 ‘핵심이익’이므로 트럼프정부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기초를 유지할 것임. 다만 기존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새로운 조정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 트럼프정부가 어떠한 외교 및 국내정책을 내놓을지, 그의 외교이념과 중점사항은 무엇일지, 모두 기다려 볼 일. 현 시점에서 트럼프정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며, 그보다는 트럼프와 측근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어떤 이념과 정책으로 변모시킬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함

○ 아시아 재균형 정책 수정(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부원장)

- 트럼프가 집권하면 현행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상당부분 달라질 것으로 판단 ▲트럼프 개인적으로 '아시아 재균형'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므로 오바마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할 가능성은 없어 보임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주목도가 거의 비슷한 공화당의 전통에 따라 트럼프 집권 후 '아시아 재균형' 정책 역시 일부 수정이 가해질 것임
- TPP 자체가 민주당이 만든 아시아 회귀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후 조정. 트럼프 정책의 중점은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남겨주는 것인데, TPP는 그 방향에 어긋나기 때문에 트럼프정부 출범 후 TPP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

4. 對美 동맹국 및 북한문제에 대한 평가

○ 아시아 재균형 전략 대폭 수정(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주평(朱鋒))

- 트럼프 집권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간 관계에 큰 충격을 몰고 올 것임
- 2016년 5월 이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한 바 있음
- 이는, 트럼프가 대외정책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고 동맹국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덜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통한 자체 안보를 독려하기까지 했음
- 북한 핵확산 문제의 경우,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김정은과 정상 회담을 개최해 북핵문제의 경색국면을 깨뜨리겠다고 말했고, 이는 오바마정부 및 힐러리 국무장관시대에 강조하던 대북 '압박과 고립' 기조와는 정반대 노선
- 트럼프는 오바마정부와 달리 아태지역 및 세계 기타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줄임으로써 보다 많은 자원을 미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따라서 트럼프의 외교정책의 주장은 미국 '신고립주의'의 시작으로 해석
- 트럼프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한국 사드배치는 클린턴정부 이후 역대 미국정부와 국방부가 장기적으로 노력해온 사안으로 미국 아태지역 군사배치의 전략적 행보를 상징

한다고 볼 수 있음. 트럼프정부가 미국의 해외 군사개입을 줄일 방침 이더라도, 미국 군사력의 아시아 전략적 배치를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뒤엎지는 않을 것임

○ 한국은 중·미간 균형외교에 치중하게 될 것(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진찬룡 (金燦榮) 부원장)

- 북핵문제 및 사드배치에 관해서는 그동안 트럼프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서 어떻게 변화할지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
- 트럼프정부가 한국 사드배치 문제를 군부에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공화당이 무기판매상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
- 북핵문제의 경우 오바마정부 당시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 정책처럼 소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중국에 넘기려 할 것이므로 중국에게는 기회이자 도전
- 트럼프가 선거과정에서 여러차례 언급한 ‘군비지출 증대,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역량 회복’에 대해서도 주목 필요. 아태지역은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며, 트럼프정부와 공화당은 군수산업집단의 이해 관계에 주목할 것임
- 무기판매상과 군수산업집단이 공화당의 지지기반임을 감안, 오바마 시기 군사적 역량의 60% 이상을 아시아에 편중시킨 것과 달리, 트럼프는 아시아·유럽·중동·발칸지역에 골고루 분배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적 영향 측면에서 트럼프는 아시아 동맹국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지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례로 한국과 일본에게 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마찰과 충돌이 늘어날 것임
 - 일본이 자국의 군사력을 키우고 군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음. 중국의 산업화는 이미 시작됐고 이는 중국 부상의 디딤돌이 되어 일본도 중국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 한국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보와 동맹 측면에서는 미국에 더 편향돼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더욱 주력하게 될 것임
 -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에 충격을 가져다줄 것이지만, 중국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힘은 이미 충분히 강대함
- “트럼프는 향후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조선반도논단」, 린하이동(林海東))
-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새로운 고립주의’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미국은 이제 이익을 위주로 하는 외교와 안보정책을 펼칠 것임
 - 이는 미국이 현재까지 세계를 관리하려는 행태와 다른 모습이며, 이러한 방향이 트럼프 집권 이후 현실화 될지 장담할 수 없음에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임

- 북한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오히려 원하고 있었으며, 그 까닭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
-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도 김정은도 트럼프가 한반도정책을 수정하길
희망하고 있음
- 북핵문제와 한반도정세에 대해 트럼프가 향후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에
대한 판단은 현재 시기상조
- 트럼프가 정치경험이 부족하지만 풍부한 비즈니스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바마의 정책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최근 트럼프의 '중국역할론' 거론으로 보아, 아마도 '당근+채찍'을 사용
하면서 당근을 먼저 채찍을 나중에 쓸 것으로 판단
- 김정은이 원하는 북·미 대화의 문을 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 한반도 정세는 오히려 현재보다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5. 중국측 전망 및 대응방안

○ 향후 4년간 중·미 관계는 이전보다 복잡하고 도전적일 것(상하이정법학원 군사전문가 니러슝(倪樂雄) 소장)

- 남중국해 문제는 다시 풍랑 속으로

- 남중국해 문제를 다시 이슈화 시켜 주변국가들을 밀집시키고 심지어 직접 군사력을 순항시키는 것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의 방법일 것. 만약 중·미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남중국해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지점

- 양국간 무역전쟁과 화폐전쟁 심화

- 트럼프는 포퓰리즘 성향이 있어 무역, 투자, 금융 등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심, 심지어 적대시는 더욱 심해질 것임
- 일부문제에서 부득이하게 중국과 협력하고 또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다소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계, 심지어 공격 가능성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임
- 구체적으로 경제무역 협력에 있어 TPP가 중국을 대처하는 것이므로 트럼프는 이름만 바꾸어 이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은 '국가안전'을 무기로 하여 중국 투자에 대하여 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임
- 달러의 확고부동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기습 공격할 것이고, 각종 구실을 만들어 반덤핑제재, 슈퍼 337조 발동 등 행동을 개시할 것이며, 이에 대해 중국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다시 풍파가 일고 무역전쟁과 화폐전쟁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를 것임

- 더욱 강경해질 미국의 對中외교

- 핵대국 사이의 전쟁은 자아희멸(自我毀滅), 더 좋은 방법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이용하여 중국을 대처하는 것이고 이는 전쟁이 없이 이기는 방법, 양자의 결합은 중국외교의 제일 큰 약점
- 당근과 무기의 결합, 트럼프는 이런 방면에서 자유자재로 외교를 펼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충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소프트파워는 문화에서 미국의 가치 등으로 중국에 대하여 각종 비밀스러운 침투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미국의 매력을 보이고, 반대로 중국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심지어 악마화시켜 더 많은 국가를 미국의 편으로 만들 것임
- 트럼프는 대만, 티베트, 신장위구르, 인권, 홍콩 등, 이런 카드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중국이 일련의 문제에서 양보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한번 양보하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것임. 상인인 트럼프는 이익을 중시하고 의리를 경시할 것임

- 글로벌전략으로 중국 포위

- 트럼프는 집권 후 중동지역에서의 철수를 재촉하면서 중국의 부흥을 환영한다는 등 외교적 언사를 통해 외교환경을 안정시킨 후 글로벌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할 동맹을 구축할 것임
- 유럽에서는 NATO를 통해 유럽국가들과의 정책적 조화를 강화할 것이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겨냥하여 일본, 한국, 호주 등을 아시아버전 NATO로 만들 것. 동시에 인도를 중국에 대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카드로 활용할 것임. 그 외에도 동남아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여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등 국가들도 교섭할 것임
- 미국은 중국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환영한다고 표시하면서도 트럼프는 이런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대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를 포섭하여 암암리에 중국을 공격할 것임

-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현대국제관계연구원 다웨이(達巍) 연구원)
 - 트럼프시대 불확실성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중·미 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주동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一帶一路를 통해 對美 의존도 점진적 축소(미국 데이턴대 MBA 천리젠(陳力簡) 교수)
 - 미국의 對中 제재조치와 관련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역내 협력 확대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며, 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가속화 등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미국정부와 새로운 소통 채널 마련(푸단대 국제이슈연구원 우신보(吳心伯) 부원장)
 - 트럼프가 중·미간 경제무역관계의 조정 및 미국 제조업 부흥 등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중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 트럼프가 과거 미국 엘리트 정치인과 여러 면에서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미국정부와 소통해야 할 것임
- 중·미 협력관계 유지(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부원장)
 - 트럼프가 집권 후 받아들 주요 임무는 경제살리기이며, 중국은 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양국 이해관계에서도 교집합이 존재

- 트럼프가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환율 개입문제에 분노를 표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중국은 엄청난 구매력이라는 파워를 가지고 있음
- 향후 중국의 대응책은 '검허'와 '우호'가 되어야 하며, 실행 가능성 있는 협력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어야 함